

넥서스 브리프

NB-2026-017 · 예금·보호 · 발행 2026년 8월 16일 · 읽기 6분

신청한 234.3 만명 가운데 95.8 만명은 왜 가입하지 못했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6 만명 중 40.9 만명은 소득 때문이 아니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 결과를 신청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심사 설계의 귀결로 본다. 가구소득을 요건으로 삼으면 청년 본인의 자료만으로 심사가 끝나지 않는다. 가구원이 소득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청년은 자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하지 못한다. 추가 가입기간은 이 절차가 그대로인 한 같은 결과를 되풀이한다.

01 ·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는 2026년 8월 10일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 결과를 발표했다.

항목	값	비고
가입 신청	234.3 만명	2026.6.22~7.3 신청
심사 통과	154.7 만명	2026.7.6~7.24 심사
최종 가입	138.5 만명	2026.7.27~8.7 계좌 개설
미통과 사유	79.6 만명 중 40.9 만명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또는 관련 서류 미제출
유형별 가입	일반형 98.3 만명(70.9%)·우대형 38.9 만명(28.1%)	
정부기여금	납입액의 6% 또는 12%	3년 만기, 월 최대 50만원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는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매칭한다.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금리는 3년 고정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진다.

가입 요건은 두 갈래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포함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제혜택만 받는다.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받았다. 심사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6월 16일 자료에서 심사가 전산 연계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8월 10일 자료에는 미통과 79.6만명 가운데 40.9만명의 주된 사유가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또는 관련 서류 미제출이라고 적혔다. 같은 자료는 이들이 추가 가입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이 심사는 두 가지를 확인한다. 하나는 청년 본인의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그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다. 본인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로 확인된다. 가구소득은 그렇지 않다. 가구원이 각자 자기 소득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확인이 끝난다. 금융위원회가 6월 16일 자료에서 서류 제출 없이 전산 연계로 심사한다고 적은 것은 본인 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가구소득 확인은 청년 본인이 혼자 마칠 수 없다.

가구소득을 요건으로 삼는 이유는 예산 배분에 있다. 정부기여금은 한정된 예산에서 나간다. 금융위원회는 6월 16일 자료에서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적었다. 본인 소득만 보면 소득이 적은 청년과 부모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청년이 구분되지 않는다. 가구 요건은 그 구분을 위해 붙는다.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가구 단위로 재려는 설계다.

확인 방법이 이 결과를 만들었다. 가구소득을 재려면 가구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가구원과 연락이 끊긴 청년이 있다. 가구원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청년이 가구원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때는 요건 충족 여부가 판정되지 않는다. 판정되지 않으면 미통과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 탈락한 것과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아 탈락한 것이 같은 결과가 된다. 40.9만명은 뒤에 해당한다.

이 구조는 이 상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선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2다. 이 조문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라는 본인 소득 기준만 정한다. 가구소득은 그 조문에 없다. 가구 요건은 세제가 아니라 정부기여금을 나누는 사업 요건으로 붙는다. 법률이 정한 요건은 본인 자료로 확인되고, 사업이 붙인 요건은 남의 동의로 확인된다. 정책금융에서 소득 요건을 촘촘히 할수록 청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확인 절차가 늘어난다.

추가 가입기간이 이 결과를 되돌리는지는 절차에 달려 있다. 다시 신청해도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동의를 받지 못한 사정이 그대로면 같은 사람이 다시 미통과된다. 재신청으로 해소되는 것은 기한을 놓쳤거나 서류를 늦게 낸 경우이고, 동의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남는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물리는 사람은 소득이 요건을 넘은 청년이 아니다. 가구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한 청년이다. 가구원과 사실상 관계가 끊겼거나, 가구원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의 청년이 여기 해당한다. 미통과 79.6만명 가운데 40.9만명이고, 전체 신청자 234.3만명의 17.5%다.

받지 못한 금액은 계산할 수 있다. 월 50만원을 3년간 납입한다고 하자. 원금은 1,800만원이다. 일반형 기여금은 납입액의 6%이므로 108만원, 우대형은 12%이므로 216만원이다. 여기에 3년 고정 기본금리 5%와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중 적금과의 차이는 기여금과 세금에서 나온다. 이 차이는 가입한 사람에게만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7월 2일 자료에서 심사 결과를 7월 24일 개별 통지한다고 밝혔다. 미통과 79.6만명 가운데 40.9만명의 사유가 동의와 서류였다는 사실은 8월 10일 자료에서 처음 공개됐다. 그 사이 신청자는 자기 탈락이 소득 때문인지 절차 때문인지를 스스로 구분해야 했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 탈락했다고 판단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이유를 찾지 않는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추가 가입기간은 신청 기회를 다시 여는 조치다.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받는 절차는 달라지지 않았다.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미통과된 청년에게는 같은 절차가 다시 적용된다.
- 가구원이 동의를 거부할 때 청년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대체 절차가 공개된 자료에 없다. 가족관계가 사실상 끊긴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8월 10일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 심사를 통과하고도 계좌를 열지 않은 16.2만명의 사유는 발표되지 않았다. 154.7만명과 138.5만명의 차이이고, 이 인원 몫의 기여금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 정부기여금은 예산 범위에서 나가고, 신청이 예산을 넘으면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동의를 받지 못해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청년은 그 순번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심사 결과가 미통과였다면 통지받은 사유가 소득 기준 초과인지,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또는 서류 미제출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둘은 다시 신청할 때 준비할 것이 다르다.
- 사유가 동의 또는 서류였다면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그 가구원에게 소득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추가 가입기간 전에 알린다.
- 취급기관 앱과 금융위원회 안내에서 2026년 9월 추가 가입기간의 일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다. 일정은 검토 단계이므로 공지 날짜를 함께 본다.

금융회사

- 미통과 통지에 사유를 소득 요건 미충족과 동의·서류 미제출로 나누어 표시하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신청자가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당국

- 가구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신청자를 소득 요건 미충족자와 분리해 집계한다. 가족관계가 사실상 끊긴 경우에 적용할 대체 확인 절차를 추가 가입기간 전에 정한다.

칼립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2026년 9월 추가 가입기간의 운영 여부와 절차.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0일 자료에 적힌 것은 검토 중이라는 사실까지다.

A로 가면 · 가구소득 확인 절차를 그대로 두고 신청 기간만 다시 열면, 동의를 받지 못해 미통과된 청년은 같은 사유로 다시 미통과된다.

B로 가면 · 가구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의 대체 확인 절차가 함께 마련되면, 40.9만명 가운데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청년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추가 가입기간 안내문에 가구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만 적혀 있는지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란	편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이자소득 과세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신규종료) 청년희망적금(종료) 청년내일저축계좌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총 신청 234.3 만명, 가입심사 통과 154.7 만명, 최종 가입 138.5 만명	1 차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6.8.10 「청년미래적금, 138.5 만명 최종 가입」 원문 전재. 원문 문장 "총 234.3 만명 신청자 중 154.7 만명이 가입심사를 통과하고, 이 중 138.5 만명이 최종 가입"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267
일반형 약 98.3 만명(70.9%), 우대형 약 38.9 만명(28.1%), 25~29 세 약 52.4 만명(37.8%) 으로 최다	1 차	위 동일. 원문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267
심사 미통과 79.6 만명 중 40.9 만명은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등의 또는 관련 서류 미제출이 주된 사유이며 추가 가입기간에 재신청 가능. 2026 년 9 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 검토 중	1 차	위 동일. 원문 문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267
만 19~34 세 대상, 월 최대 50 만원 자유적립, 3 년 만기,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 기여금 매칭, 이자소득세 비과세	1 차	금융위원회 2026.6.22 「청년미래적금 출시」 원문 전재. 원문 문장 "만 19~34 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 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3 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 "정부가 납입액에 대해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2978
일반형 총급여 6,000 만원·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총급여 3,600 만원·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포함), 총급여 7,500 만원 이하까지 가입 가능하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제혜택만 부여	1 차	금융위원회 2026.4.23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원문 전재. 원문 문장 "일반형(납입액의 6% 기여, 총급여 6,000 만 원 및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과 우대형(납입액의 12% 기여, 총급여 3,600 만원 및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포함) 구분 적용되고, 총급여 7,500 만 원 이하까지 가입 가능하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제혜택만 부여함"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0054
"만 19 세부터 34 세까지의 일정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심사는 전산 연계로 서류 없이 진행되고, 예산 초과 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절차는 6.22~7.3 신청, 7.6~7.24 심사, 7.27~8.7 계좌 개설	1 차	금융위원회 2026.6.16 발표 원문 전재. 원문 문장 "심사는 전산 연계로 서류 없이 이뤄지고, 가입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가입절차는 6.22.~7.3. 가입신청, 7.6.~7.24. 가입심사, 7.27.~8.7. 계좌 개설 순으로 진행"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2692
심사 결과를 2026 년 7 월 24 일 개별 통지한다는 안내	1 차	금융위원회 2026.7.2 발표 원문 전재. 원문 문장 "신청 마감 후 3 주간 자격심사가 진행되며, 7.24.(금) 개별 통지 예정"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741
3 년 고정 기본금리 5%, 취급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2~3%로 최대 7~8% 수준	1 차	금융위원회 2026.5.29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 원문 전재. 원문 문장 "3 년 고정금리 기본금리 5%와 기관별 최대 우대금리 2~3%로 최대 7~8% 수준 금리가 제공"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1817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2(청년도약계좌 비과세)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 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 만원 이하라는 본인 소득 기준만 정하고, 가구소득 요건을 두지 않는다	1 차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서비스로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22 조문 원문(법률 제 19936 호, 2023.12.31. 기준). 제 1 항의 소득 요건 및 제 4 항의 국세청장 확인 절차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 hseq=64489&cseq=1949555
청년도약계좌 개설 152 만명, 2024 년 9 월말 기준 가입유지율 88%(시중은행 적금 45%, 청년희망적금 77%)	1 차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 2024.10.31 발표 원문 전재. 본문에는 쓰지 않았고 앞선 상품의 유지율 비교 확인용으로만 둔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9012
신청 234.3 만명과 최종 가입 138.5 만명의 차이 95.8 만명	파생	234.3 만 - 138.5 만 = 95.8 만. 발표 자료의 두 수치를 뺀 값이다
심사 통과 154.7 만명과 최종 가입 138.5 만명의 차이 16.2 만명	파생	154.7 만 - 138.5 만 = 16.2 만. 발표 자료의 두 수치를 뺀 값이다
동의·서류를 사유로 한 미통과 40.9 만명은 전체 신청자 234.3 만명의 17.5%	파생	$40.9 \div 234.3 = 0.1745$. 발표 자료의 두 수치로 계산했다
월 50 만원 3 년 납입 시 원금 1,800 만원, 일반형 기여금 108 만원, 우대형 기여금 216 만원	파생	50 만원 $\times$ 36 개월 = 1,800 만원. 1,800 만원 $\times$ 6% = 108 만원, 1,800 만원 $\times$ 12% = 216 만원. 월 납입한도를 모두 채운다고 가정한 산술 예시이며 발표 자료에 제시된 수치가 아니다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566 자	14 건	10 건 (71%)	6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추가 가입기간 종료 후 미통과 사유별 인원이 다시 공개되는가.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또는 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한 미통과가 40.9 만명에서 얼마나 달라졌는가. 가구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대체 확인 절차가 안내문에 들어갔는가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